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국가경제 위난의 해결은 개혁과 기강 확립으로…”

98년의 동녘하늘은 밝게 빛나건만 97년의 어둡고 침울함은 계속 가슴속을 죄어오고 있다. 97년을 마무리하면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선거혁명을 이룩, 새 희망과 활기찬 기운을 기대했다. 그런데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러할까? 「IMF 신탁통치」의 영향일 것이다. 경술국치 또는 6.25전쟁 이래 다시 맞는 국난 앞에서 선거혁명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감상적이고 무모한 발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이래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명예혁명을 처음 시현해본 자부심은 「국치」를 돌파하고 국가경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쾌거가 아니던가.
아마도 50년을 면면히 이어온 권력독점과 그로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독점재벌의 국가경제 장악, 그리고 부패와 재벌에 기생하는 사이비언론의 폐해 때문일 것이다. 덧부쳐 50년의 독재와 부익부 심화현상은 많은 국민들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참과 정의」를 외면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98년의 햇살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일상화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고민과 고초」의 또다른 표현일 것이다. 「정권교체와 개혁」이라는 메카니즘을 외면했던 결과가 바로 「국가부도 위기」라는 국가존망의 위기를 불러왔지 않은가.
따라서 새 정부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정도」가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관료조직의 개혁이고, 둘째는 차입과 문어발경영으로 국가경제를 파산으로 이끈 재벌경제의 혁신이며, 셋째는 부패와 재벌에 기생하면서 사회혼란을 부채질한 사이비언론의 혁파이다.

부정·부패·무능으로 얼룩진 관료조직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비롯 산하조직, 연구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성원수가 586급 머리로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효율적으로만 운영된다면 조직과 구성원수가 많다는 자체는 그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조직은 중앙정부, 단체, 지방정부를 가릴 것없이 업무가 중복적이고, 「효율」이라는 단어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없어서 좋은」 아니 「반드시 없애야」 할 것으로 평가될만치 「역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50년동안 정권교체가 전무한 까닭에 부정부패는 만연될대로 만연돼 있고, 대부문의 업무수행이 이권화되어 있으며,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이단자 취급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편안은 중앙부서를 12~15개로 축소하고, 공무원수는 35~50%를 감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작은 정부 구현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부처를 위주로 지적하면 재정경제원의 예산업무는 국무총리실로, 금융업무는 한국은행으로 이관해 장관급 재무부로 개편하고, 무역위원회를 부로 승격시켜 외무부 및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의 무역·통상업무를 일원화시키며, 통상산업부는 에너지 및 산업업무에 과기처의 산업기술 관련업무 및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을 흡수해 산업기술부로, 과기처는 기초기술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해체시키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재통합해 농수산부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환경부를 통합해 식품 및 제약산업 업무는 농수산부와 산업기술부로 이관하고 보건환경부 및 노동청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병역면제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효율성 「제로」를 자랑하고 있는 과기처 및 통상부, 경제관련부처의 외곽 연구단체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문어발 · 차입경영으로 IMF 부른 재벌

우리 국민들은 「IMF 신탁통치」를 부른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들이 재정경제원의 실책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재경원의 판단 잘못으로 막대한 국부를 손실시키고, 치욕적인 조건으로 달러화를 빌어다 써야 했다. YS의 무능과 편견도 한 몫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재경원의 실기도 YS의 무능도 아니다. 다름아닌 재벌들의 무절제하고도 무자비한 차입경영이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재벌당 부채규모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500% 안팎은 일상이며 심지어 1000%를 넘는 재벌들도 있다.

한국재벌들은 60년대 산업화 초기부터 정 · 경유착을 통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지기수로 받아왔음은 물론 정부 및 사금융 자금을 호주머니 돈 꺼내쓰듯 사용하고, 그것도 부족해 각종 명목을 빌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떼어먹는 강도짓을 자행해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보에 이어 기아사태로 이어져 국가경제를 부도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정 · 경유착은 날이 갈수록 심화돼 경제의 생명줄을 움켜쥐는 지경에 이르렀다. 삼성과 현대는 골깊은 영역싸움으로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기아그룹의 부도위기를 생산 · 재생산함으로써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의 목을 죄는 최악의 우를 범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별다른 수도 없거니와 「IMF 신탁통치」를 역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IMF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재벌들이 그토록 저항해왔던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해소를 비롯 과도한 차입경영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IMF의 간섭이라는 측면에서 기분나쁜 사항이지만, 국내경제 측면에서는 당연하고도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

부정과 부패로 찌들어버린 「사이비언론」

「IMF 신탁통치」를 부른 또다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패한 정권 및 재벌과 유착해 이권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비언론」이 온통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란 사회의 공기로서 정권을 비롯 경제 · 사회적 모순과 잘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최우선일진데, 국내의 일부언론들은 언론 고유의 순기능은 모른채 오직 돈(광고)에만 눈이 어두워 재벌 보호, 투기 부추기기, 부패정권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를 파탄시킨 주범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어거지 논리로 편파보도를 일삼지 않았던가.

방송은 어떠한가. 권력과 재벌 편들기는 예사이고, 여기에 한술 더 떠 한갖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면서 고유문화를 파괴하는데 최고의 기술풀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TV라는 매체는 국고낭비와 광고폭리를 통해 무절제한 해외촬영과 분에 넘치는 호화 무대장치를 일상화하고, 심지어는 경품을 통해 재벌들의 상품광고를 대행하고 브로커들의 「촌지」와 향락에 매료돼 몰가치한 프로를 제작, 국민정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들 사이비언론을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관료조직과 재벌의 혁파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은 강조하지 않아도 익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고, 또 획기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까지 50년동안 정권교체가 없었던 관계로 정 · 경유착과 부정 · 부패가 권력과 부의 근저를 형성하고 이것이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어왔음을 부인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패와 모순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정권교체는 바로 1차적 작업이었고, 2차 또는 3차에 걸친 본작업은 새 정부의 몫이다. 사회개혁을 급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도 새 정부의 몫이다.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결코 사회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고, 또 혼동해서도 아니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YS가 개혁에 실패한 것은 개혁에 대한 욕구가 약했고, 기득권세력의 후원아래 정권을 잡았다는 한계 외에도 법을 공정 · 공평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또 보복적인 수단으로 사용 ·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의 고리를 단절시키지 않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화학저널 1998/1/5>